

3. 하반기 실업대책

- (주요 내용) 98년 하반기 실업대책은 일자리 확대 제공, 고용안정 노력,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보호 네부분으로 구성됨
- (기본 방향) 예산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실업대책의 초점을 고용창출로 전환했으며, 실업자 특성별 대책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
- (평가 및 과제) 단기 보완책과 단발성 생활보호 측면에 비중을 많이 뒀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 증대, 중장기적 실업 대책 등이 미비. 상황 변화를 반영한 단기 대책 보완과 일관된 중장기 대책 추진이 요구됨

□ 하반기 실업대책의 내용

- (상반기 평가) 경험 부족과 단기간의 계획수립에 따른 준비 미비로 사업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자원배분, 실직자 대상 직업훈련의 성과 미비,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노출함
 - 이에 따라 ▷해고회피 지원사업과 실업자 대부사업의 목표 축소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발굴 ▷동절기 생계보호를 위한 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능과의 연계 강화 ▷직업훈련 내용 및 방법에 수요자의 의견 반영 ▷일관성있는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분석평가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안이 제기됨
- (하반기 실업대책의 주요 내용)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에 대한 고용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크게 ▷일자리 확대 제공 ▷고용안정 노력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보호 등 네부분으로 구성됨
 - 하반기 실업대책은 실업률 7.9%, 실업자수 170만 명 전망에 근거하여 마련됨
 - 상반기 4~7월 예산 2조 6,612억 원의 3배에 달하는 7조 5,107억 원의 예산을 책정, 208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계획을 세움
- (기본 방향) 실업대책의 초점을 고용창출로 전환했으며, 실업자 특성별 대책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선됨
 - 그동안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발생 최소화'에 실업대책의 목표를 뒀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한 면이 있었음

- 하반기에는 기업 구조조정에 다른 실업 발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대신 이들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기로 함
- 한편 지금까지의 실업대책이 실업자 개개인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 일용직, 청소년, 고학력 미취업자, 여성 가장실업자, 사무·관리직 실업자, 노숙자 등으로 분류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임

< 하반기 실업대책의 주요 내용 >

일자리 확대 제공 - 예산 : 4조 2,302억원 - 대상인원 : 30만 6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 지역경제사업, 공공근로사업, 주택 건설사업 조기 추진 ·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은 예산배정 즉시 착수 · 지역경제사업 8월 말 지방채 발행 승인
고용 안정 - 예산 : 1조 1,575억원 - 대상인원 : 3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신용보증 여력 연말까지 최대 97억원으로 확대 · 중소·중견기업에 원자재 구입에 20억달러 집중지원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13조원어치 구매 촉진 · 국민주택기금에 주택분양자금 3천억원을 투입,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 도모 · 벤처기업 법인의 창업자본금 인하(5,000만원→2,000만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예산 : 5,822억원 - 대상인원 : 19만 7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개 미래유망 직종 훈련 프로그램 제작·보급 · 수요자가 원하는 훈련기관·과정을 선택해 이수하는 훈련바우처제 도입 · 훈련수당 인상·지원체제 정비 · 실업급여-직업훈련-직업안정 연계해 '원스톱서비스' 체제 확충
실업자 생활보호 - 예산 : 1조 5,408억원 - 대상인원 : 128만 5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공공근로사업시 일용직에 적합한 사업 개발 · 4만명의 대졸미취업자 6개월간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실직 여성가장 고용 촉진을 위한 '채용장려금' 도입 · 해외취업 가능분야를 발굴해 외국진출 추진 · 노숙자에게 공공근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알선
총 예산 : 7조 5,107억원, 대상인원 : 208만 8천명	

□ 하반기 실업대책의 평가와 과제

- (평가) 예산 배정 및 지원 항목이 일정부분 개선된 반면 단기 보완책과 단발성 생활보호에 지나치게 비중을 둬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 증대, 중장기적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등이 미비함
- 상반기에 비해 해고회피 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직접적 생활보호책의 강화는 실업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단기간내에 대규모로 발생하는 실업자들에게서 실질적·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 혼란 최소화 차원에서도 불가피하기 때문임
 - 한편 단기간의 실업 급증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에 주안을 두다보니 고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소홀함
 - 또한 유효수요 창출을 통해 민간 기업의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의 경우 단발성 보호 및 공공근로 수당 부분이 해당 예산의 63%(3조 원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자립의지 제고에 역점을 둔다는 취지에는 어긋남
 -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와 예상실업자의 특성간의 불일치도 문제가 될 수 있음. 하반기에는 대기업, 금융권 및 도소매업 종사자의 실업이 크게 증가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동수요 가운데 90% 가량이 쓰레기 수거, 도로·상하수도·교량 개보수, 건설 등 노무 중심의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음
- (과제) 단기적 대책으로는 공공사업의 신중한 선정, 창업지원 제도의 개선, 노동통계의 개선, 실업자 구성의 추이 반영 등이,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의 신속한 완료, 고용창출능력 확대, 규제완화의 전면적 완화, 포괄적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요구됨
- SOC 투자 사업은 장기적 효율성 제고와 고용창출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
 - 벤처기업 중심의 창업 지원 제도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는 의문시되므로, 단순 지원보다는 기술의 사업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함
 - 향후 실업 구성의 추이에 대한 평가 등을 토대로 관련 대책을 조정
 - 실업대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비효율적 사업을 폐지 내지는 축소하고 효율적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함
 - 한편 99년 이후를 준비하는 근본 대책으로서는 구조조정의 신속한 완료와 경제의 고용창출능력 확대, 포괄적 사회안전망 확충이 요구됨
 - 더불어 일자리 보호 명분하의 각종 규제에 대한 전면적 완화나 폐지,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기술과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시스템 구축, 주택·사교육비 축소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포함한 방향에서의 사회안전망 사업 추진 등도 필수적임

(민 주 흥 jhmin@hri.co.kr ☎724-4014)